



# 기 술 정 보



월간 기술정보지 통권 제50호 (2015년 10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조감도

## 목 차

### ■ 건설관련 소식 ..... 1

-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본격 재시동
- 경남도, 하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 경남도,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 개최
- 경남도,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725억원 확보
- 서부대개발 자문위원회, 산청·함양·합천 등 서부대개발 현장 투어
- 경남도, 아파트 부당집행 뿌리 뽑는다
- 경남도,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8.5% → 3% 대폭 낮춰
-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수 모색
- 창원산단에 혁신지원센터 들어선다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개소식

### ■ 건설지식정보 ..... 12

-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하늘길 개설 기반 마련
- 건축 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 500억 이상 공사에 청년기술자 의무배치
- 공익사업지구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 ■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 18

### ■ 신기술 정보 ..... 26

### ■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현황 ..... 28

### ■ 기술인 나눔 정보 ..... 30

###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본격 재시동

#### ▶ 경남도, 23일 (주)대우건설컨소시엄과 실시협약 체결

경남도는 2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조성사업 현장에서 (주)대우건설컨소시엄과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안상수 창원시장, 박영식 (주)대우건설 사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던 울트라건설(주)의 부도로 공정 13%에서 중단되어 좌초위기에 있었으나, 경남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이 국내 10위권 대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이고 세밀한 투자유치 노력 끝에, '15년 국내 도급순위 3위인 (주)대우건설을 대체사업자로 영입하는데 성공하여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경남도는 (주)대우건설 영입과정에서 창원시, 로봇랜드 재단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친 협상을 적극 추진하여, 최소운영 수익보장(MRG), 사업중단 시 의무적 매수청구권, 2단계 사업부지 매각차액 임의적 사용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배제하고, 그간 논란이 됐던 “해지시 지급금”에 대해서도 기존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법」을 준용, 법기준보다 지급율을 18.5~25% 적게하여 행정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이번 실시협약에 따라 현장인수와 측량 등 공사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11월 중 토목공사를 재개 할 예정이며, 내년 3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여 1단계사업(공공부문 및 테마파크)은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사업(민간부문)은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국가의 로봇산업을 선도할 중요 국책사업인 로봇랜드조성사업은 한국 로봇산업의 발전과 침체되어 있는 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다가올 로봇혁명 시대에 우리 후손들이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요구 사업이다.”고 말했다.

박영식 (주)대우건설사장은 “세계 최초의 로봇 테마파크와 연계된 로봇산업기반 조성사업인 로봇랜드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1만여 명의 고용창출효과와 8천500억 원의 생산파급 효과로 인해 침체된 마산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로봇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로봇랜드를 기반으로 한 로봇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여 마산지역 일대를 국내 로봇산업의 메카로 육성, 「미래형 스마트 로봇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근의 진해글로벌테마파크 및 구산해양관광단지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비즈니스 모델 창출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000억원(국비 560, 도비 1000, 시비 1100, 민자 4340)을 투입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반동리 일대 126만㎡(38만평)에 R&D센터, 로봇전시관, 로봇시험장 등 로봇산업 공공시설과 세계최초 로봇테마파크, 호텔 등 민간시설을 건립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 자료 : 도 기계융합산업과 로봇산업담당 (055)211-3233

## 경남도, 하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 시·군·구 대상으로 표본검사 실시

경남도는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도모하고 민원예방과 지적측량 서비스 개선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2일 간에 걸쳐 창원시 마산합포구 외 10개 시·군·구(마산회원구,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표본검사는 5개반 10명의 검사반을 투입, 지적측량업체가 지난 1년간 측량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한 성과를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지적측량 수수료 적용실태 등이다.

한편, 상반기 표본검사 결과로는 지적측량 결과도 작성 미흡, 기존 측량파일 활용의 부적정 및 기존 자료조사 미흡 등 총 54건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하도록 조치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바 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선 시·군·구 지적측량 검사자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실질검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토지정보과 지적관리담당 (055)211-4415

## 경남도,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 개최

### ▶ 지역 의견 수렴해 국가 건축정책에 반영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김석철)가 주최하고 경남도가 주관한 ‘2015 제2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동남권)’이 9월 17일 오후 2시에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건축정책에 대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 건축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박찬용 정책포럼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국가건축위원회(이하 국건위) 위원,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 이병희 경남도의회 부의장, 부·울·경 지역 대학교수·건축사, 지자체 공무원, 건축전공 대학생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포럼은 ‘범죄예방설계(CPTED)의 현재와 미래’와 ‘건축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도시발전 방안’의 2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석진 경상대학교 교수가 첫 주제인 ‘범죄예방설계(CPTED)의 현재와 미래’의 발제자로 나서 발표하였으며 하기주 국건위 위원이 좌장을 맡고, 조영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조용범 경남건축사회장, 김철권 부산시 디자인지원담당사무관, 고성룡 경남건축가회 회장, 조정혜 로템의집 관장, 손원진 함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이 패널로 나섰다.

현재 한국셉테드학회 이사인 강석진 교수는 범죄예방을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범죄예방설계 기법을 소개하고 여러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에 패널들은 현재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 분야의 범죄예방설계 시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향후 범죄예방설계를 확산

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두번째 주제인 ‘건축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도시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창원대학교 유진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김태중 경남대학교 교수가 좌장, 김지민 국건위 위원, 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신삼호 U&A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호열 부산대학교 교수, 유장근 경남대학교 교수, 김기수 동아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나서 토론을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유진상 교수는 경남의 근대건축문화유산 현황과 사라져가는 근대건축물을 보존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외 근대건축물 활용사례를 소개했으며, 패널들은 대부분의 근대건축물이 개인의 소유에 다 문화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많아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최근 지역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사라져가는 근대건축물의 보존·활용 방법에 대해 토론을 하였다.

이날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다양한 건축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국토와 쾌적한 삶터조성을 선도하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감사를드린다.”며, “이번 전국순회포럼을 계기로 지역 건축현안을 되돌아보고, 포럼에서 토의된 내용이 국가건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앞서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건축과 친환경건축담당 (055)211-4324

## 경남도, '16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비 725억원 확보

▶ 총 65개사업, 시·군당 평균 4건, 전국 예산 확보 1위 달성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2016년도 신규사업 평가결과, 전국 최다인 국비 725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1개 지구, 마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9개 지구를 비롯하여 총 65개 지구가 '16년도 신규사업(총사업비 1,036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에서는 '16년도 신규사업으로 전국 406개 지구를 선정하였는데 경남도는 65개 지구가 선정되어 16%를 점유하였다. 지난해에는 68개 지구가 선정되어 17%를 점유한 바 있다.

\* 신규사업 확정 : 65개 지구 총 1,036억원

(국비 725, 도비 93, 시군비 218)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11개 지구 609억원
- 마을·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 : 9개 지구 219억원
-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 45개 지구 208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 농촌유입을 촉진시키고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유형으로는 ▲ 농촌중심기능 활성화와 배후마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확충 및 지역소득증대와 경관개선을 위한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 주민 및 지자체 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교육프로그램 운영, 준공지구 사후관리를 위한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이 있다.

이번 확정된 신규사업은 주민들의 사업구상에 따른 상향식의 다양한 유형의 사업으로써 '16년도부터 추진하게 된다.

사업비는 중심지활성화사업 선도지구(2지구)에 각 80억원, 일반지구(9지구)에 각 60억원이 5년에 걸쳐 지원되며, 마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중 마을종합(4지구)은 각 10억원, 권역종합(5지구)은 각 40억원이 지원된다.

사업선정은 경남도의 1차 평가(30%)를 거쳐 농식품부의 최종 평가(70%)로 결정된다.

그간 경남도는 '10년 이전까지 전국 하위권에 머물던 사업을 상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결집시켜 왔다.

주민·지자체·한국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였고, 또한 도에서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를 활용한 마을 현장포럼 및 마을발전계획수립 지원을 하는 등 사업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13년도에 전국 상위권에 진입하게 되었고, '14~'15년도에 이어 '16년도 에도 전국 최고의 신규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정곤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경남도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개발 전문가들과 함께 신규지구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17년 신규지구 선정시에도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담당  
(055)211-6243

## 서부대개발 자문위원회, 산청·함양·합천등 서부대개발 현장 투어

▶ 최구식 서부부지사, 교수자문위원들에게 서부대개발 설계 주문

“서부대개발 교수자문위원님께서 서부대개발의 기본 설계를 멋지게 해주시면, 경남도는 최선의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향후, 서부권은 21세기 개발의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구식 경상남도 서부부지사는 지난 9월18일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린 「서부대개발 정책개발을 위한 교수자문위원회 현장투어」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남도는 홍준표 경상남도지사의 “경남미래 50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서부대개발 시대의 핵심 사업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도는 100여명으로 구성된 서부대개발 교수자문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성과 함께 세계적 패러다임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날 현장 투어에는 최구식 부지사를 비롯하여 지현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성낙주 자문위원장 및 자문위원회 자문교수 25명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산청·함양·합천군의 서부대개발 현장을 방문하였다. 참여한 자문교수단은 의학 분야, 바이오 분야, 식품가공 분야의 전문교수 등으로 향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자문위원들은 산청의 동의보감촌, 함양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농업기술센터, 합천의 정원테마파크, 삼가양전산업단지 등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서부대개발의 핵심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서부대개발 기본 방향과 설계를 구상했다.

최구식 부지사는 현장 투어에서 “산청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룬 이곳에서 교수자문단현장 첫 자문회의를 갖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20세기 개발은 난개발 등으로 공해와 자연훼손이라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21세기는 자연생태적 개발이 각광을 받을 것이고, 그중에 으뜸이 바로 지리산을 기점으로 한 향노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부대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본 자문교수단은 지금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향노화 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산업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어 경남도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성낙주 자문위원장은 경남 서북부권이 향노화산업의 기본적인 입지와 인프라 구축 산업화에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투어는 지난 7월9일 서부대개발 자문위원회 출범과 8월11일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에 이은 첫 서부대개발 현장방문으로 서부대개발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서부청사추진단 서부청사팀담당 (055)211-6013

## 경남도 아파트 부당집행, 뿌리 뽑는다

▶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총 69건, 3억 2700만원 부당사용 적발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중 7~9월 사이에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입주민 등으로부터 감사요청 받은 9개 단지를 감사하여 모든 단지에서 부당집행 등 총 6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여 회수 7건 2억 5683만 원, 개선집행 6건 2440만 원 및 과태료 19건 4600만 원 등을 부과했다.

○○시 ○○아파트에서는 2014년도에 시행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입찰 시 3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나 그 중 낙찰자를 제외한 2개 업체의 입찰보증서가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사실이 없는 위·변조 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받게 됐다.

○○시 ○○아파트에서는 2013년도에 장기수선계획에도 없고 장기수선공사도 아닌 청소업무를 장기수선총당금으로 집행했다.

○○시 ○○아파트에서는 2012년과 2013년에 장기수선계획대상도 아닌 조경수 전정작업, 방역소독비 등 총 7건의 용역비를 장기수선총당금으로 지출하고, 그도 모자라 2건은 공개경쟁입찰대상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득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4년도에 전, 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 등으로 제기 된 소송비용을 아파트관리비로

집행하면서 입주자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이미 지출한 소송비를 물어내게 됐다.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하여 공사를 하거나 용역을 시킬 때 계약금액이 200만 원이 넘으면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물량을 분할하거나 고의로 유찰시킨 후 수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시행 한 사례도 있다.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 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두 과태료 부과처분이 뒤따른다.

이번 감사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에 특정인을 동대표를 뽑지 않기 위해 한 세대에 2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방문투표를 하면서 과반수가 미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무효화 시켰다. 이후에도 1년여 동안 동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관할 시청의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선거를 실시하여 엄중 주의조치를 받았다.

부녀회 등 아파트 내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은 접수입 규모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이 또한 입주자 전체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때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아파트에서는 자생단체 회원 간의 경조사비는 물론 야유회비, 명절선물비 및 회식비용 등이 포함 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지도 않아 엄중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례 중에 입주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주의명령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 자료 : 도 감사관실 공동주택TF  
(055)211-2183

## 경남도,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비율 8.5% → 3% 대폭 낮춰

- ▶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건설경기 촉진
- ▶ 임대주택 건설비율 탄력적 운영을 통한 재개발 활성화

경남도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8.5%에서 3%로 대폭 낮추기로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 구역 내 기존 세입자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건립토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5~17%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고 있었으나 2015. 5. 29자로 규제완화 및 재개발 촉진을 위해 12% 이하로 완화하였다.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임대주택은 LH공사에서 인수를 하게 되나 공정 80%에서 인수에 따른 이자비용과, 분양가 대비 70% 선에서 인수가격이 결정되어 재개발조합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동안 구 마산지역 22개 구역, 통영 1개 구역 등 총23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2006년경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10여년이 도래되는 현재까지도 18개 구역에서 사업진척이 더딘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005년부터 8.5% 이상으로 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국토교통부 조치와 연계 금번 3%로 완화하여 이를 통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완화에 따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군수가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희망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5%까지 임대주택 건립이 되도록 하여 세입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임대비율 완화에 따른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 LH공사, 경남개발공사가 주축이 되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2,000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토록 하여 금번 완화에 따른 주거불안이 발생토록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50여 억원을 투입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노후 임대주택 수선비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번 임대주택비율 개정내용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10월 중에 시행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자료 : 도 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211-4313

##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수 모색

- ▶ 18일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관계자 150여 명 참석 심포지엄 개최

남부내륙고속화 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경남도와 진주시가 합동으로 18일 오후 3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성장벤처지원동 대회의실에서 관련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지역상공회의소 등이 참석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최구식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축사를 통하여 “남부내륙철도는 서부경남의 50년 숙원사업 해결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기간산업(항공, 조선해양플랜트)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이어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통일대비 고속철도망 구축방향과 남부내륙철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후,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문태현 경상대학교 교수의 “지역계획과 교통”, 류명현 경남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의 “중국 서부대개발 인프라 구축사례를 통해 본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의 당위성”, 하승철 진주시 부시장의 “남부중심권 발전”,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남부내륙고속철도의 타당성”으로 각기 지정토론 분야에 발표를 하게 된다.

류명현 경남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에 의하면 “남부내륙철도는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경남미래 50년의 꽃이며 서부경남 대개발을 위한 화룡점정이 될 핵심적인 사업으로써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조사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반기에 통과하기 위해 정치권과,

관련 지자체,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한다.



■ 자료 : 도 서부권전략사업과 남부내륙철도담당  
055)211-6054

## 창원산단에 혁신지원센터 들어선다

### ▶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창원산단 구조고도화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창원국가산단에 정부 지원 혁신지원센터 설립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경남도와 창원시, 산단공 경남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준비해 온 창원국가산단 스마트혁신지원센터가 사업 지원 대상단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21일 밝혔다.

혁신지원센터는 노후산업단지 업종고도화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경남도가 주관기관이 되고 창원시는 참여기관, 산단공 경남지역본부는 사업기관이 되어 공동으로 추진해 1차 현장실사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창원산단 등 전국 4개 산단이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창원국가산단이 혁신지원센터로 선정됨으로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비 40억원, 산단공 60억원, 창원시 5억원 등 총사업비 105억원을 들여 스마트혁신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스마트혁신지원센터는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산단공 소유의 물류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창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 창원산단 발전 전략 수립, 구조고도화 사업예산 확보 등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출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 유치와 시제품 제작공간 확보는 물론 산업단지 내 문화, 복지 등의 인프라 확충 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혁신지원센터가 예정된 산단공 물류부지는 산학융합지구, 근로자복지타운, 창원드림타운 등의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이 이미 확정되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은 첨단산업 융복합집적지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 경남창원과 학기술훈원 내 위치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 하는 창조경제혁신펀드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창조펀드는 올해부터 5년간 경남도가 80억원, 경남은행 20억원, 두산중공업 100억원, 정부펀드인 성장사다리펀드 100억원 등 300억원을 출자해 10년간 도내 예비창업자의 활발한 창업과 창조적 아이디어의 성공적 사업화 촉진 등에 지원된다.

이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메카트로닉스(기계, 소재, 부품, 전자, 전기, ICT), 항노화산업, 물산업 등과 관련한 경남소재 중소·중견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분야다. 특히 지역소재 기업이나 전략산업에 총액의 70% 이상이 투자된다.

펀드를 운용 할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공고하였고 이번 주 중 운용 제안서 접수 절차를 거쳐 10월중 최종 선정하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조규일 경남도 미래산업본부장은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혁신지원센터와 지난 9월초에 확정된 산업단지 클라우드 시범사업, 그리고 지난해 말 선정되어 설계용역 중인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창원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창원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지난해 3월 창원산단이 혁신대상단지로 선정된 후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았고 2023년까지 공간조성, 혁신역량, 환경개선 등 3개분야 21개사업에 총 8,529억원(국비 3,473, 지방비 1,541, 산단공 등 민자 3,515)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 자료 : 도 국가산단추진단 국가산단추진담당  
(055)211-3112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 ▶ 뿌리산업 육성과 체계적 기업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 서부대개발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성장엔진 가동

경남도는 뿌리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진주시와 공동으로 건립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개소식을 9일 10:30분 진주시 정촌면 신축청사 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주최하는 이날 개소식에는 경남도 최구식 서부부지사를 비롯하여 김재경, 박대출 국회의원, 이창희 진주시장,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산업부 김용래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과보고, 건립 유공자 표창, 내빈축사와 테이프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의하면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건립은 지역 최대 관심 사업임에 따라 지역단위 기관·단체장과 기업인, 지역주민등 약700명이 참석한다.

최구식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이날 축사에서

“항공국가산단 조성이 진행 중인 서부권에 금형·소성가공분야를 특화 지원할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되어 앞으로 항공 등 경남 주력산업의 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축하하고, “이는 서부청사 개청, 남부내륙철도 조기개통, 항공국가산단 조성 등과 함께 진주를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추진하는 성장거점 중추도시로 거듭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및 기업지원체계 구축과 제조업기술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주시 정촌면 정촌일반산업단지내 1만8,577㎡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4층의 기업지원동과 연구지원동을 비롯한 시험생산동(소성가공동/초정밀가공동/형상가공동) 3개동 등 연면적 8,543㎡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국비 121억원, 도비 125억원, 시비 105억원 등 총사업비 351억원을 투입하여 센터신축 외에 금형·소성가공분야 중대형 특화장비 23종을 구축하였다.

향후 운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맡게 되며, 센터장을 비롯한 석·박사 인력 20여명이 상주하여 기술개발 및 각종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센터는 앞으로 뿌리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국책 연구과제 수행은 물론 중소 뿌리기업의 R&D역량 강화와 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상품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또한 산·학·연·관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기술교류와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센터건립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도지사 표창을 수여받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류호연 센터장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추진 중인 7개 뿌리기술지원센터 중 가장 큰 규모의 센터로 다양한 장비를 구축하였다.”며, “앞으로 경남도와의 긴밀한 운영협력과 공동사업수행을 통해 2020년까지 50여 명의 연구인력이 상주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센터 주변에는 배후단지로서 진주(뿌리) 금형일반산업단지 외에 산업부로부터 지정('14년 9월)받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어, 진주시 정촌면 일대는 앞으로 동남권 뿌리산업의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뿌리센터는 뿌리산업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자료 : 도 기계융합산업과 기계융합담당  
(055)211-3215

###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하늘길 개설 기반 마련

- ▶ 한-네덜란드 국제항공 노선 운항횟수 증대된다
- 풍차와 튜립, 렘브란트와 고흐, 히딩크, 그리고 헤이그 특사로 기억되는 멀지만 가까운 나라, 네덜란드로 가는 하늘길이 확대된다.
-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9월 22일~23일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부산-암스테르담 노선에서 주3회 운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이로써 부산·영남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하지 않고 김해공항을 통해 직접 네덜란드로 가는 하늘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해-뮌헨 노선을 운항하던 독일 루프트한자가 수요 부족으로 단항한 이래로, 부산·영남지역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승 내항기나 KTX 등을 이용해 인천으로 이동하거나 제3국을 경유해야 했으나,
- 김해공항에서 네덜란드로 가는 직항 노선이 개설되면,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암스테르담)에서 환승을 통해 인근 유럽지역으로 여행할 수 있게 되어 항공교통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044)201-4211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14.12.29)를 통과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8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5.9.8.~'15.10.19)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위원회 사전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매몰 비용 최소화
  - 소규모 사업지의 경우 인·허가를 받기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는 생략
  - 다만,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면적·건축연면적이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이 10%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시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함
-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통보

##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구체화

- (구성) 인허가에 관련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개별 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20명 이내)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 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요청 후 5일 이내)을 받으며, 인허가 유형·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마다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해당 인·허가를 위한 필수 위원회는 위원을 2명 이상 포함)
- (운영) 회의록을 작성·공개하고(심의종결 후 60일 이내), 민원인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도 허용
  -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 여부, 회의예정일, 상정안건, 회의참석 가능 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

## ③ 합동조정회의 및 토지이용인·허가조정위원회 운영

- (조정회의) 관계기관 간 의견 충돌시,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조정
  - 이권 조정을 민원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여부를 결정, 조정 사안 관련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

- (조정위원회) 조정회의만으로 이권 조정이 곤란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국토부)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안을 결정·통보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관련 부처 등으로 구성\*하고, 비상설 운영
  - \* 국토·산업·환경·농림·교육부, 산림청·문화재청, 이권 기관 등과 민간전문가
  -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 가능

## ④ 상담·자문 등을 통한 정보 제공

- 인허가 관련 규제사항 및 세부 절차, 유사 인·허가 사례, 인·허가 예정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확정·고시된 계획 등의 정보를 민원인이 회신받고자 선택한 경로(주소지, 전자메일 등)로 제공
- 참고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16.1.21일부터 시행되며, 법령 없이 특별법만으로 집행가능한 사항\*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0일 지자체에 독려한 바 있다.
  - \* 관계기관 일괄협의, 협의기간(10일), 심의(30일), 서류보완(1회), 재심의(2회)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1

## 500억 이상 공사에 청년기술자 의무 배치

### ▶ 건설 일자리 창출대책 - 시장 맞춤형 인력 양성 노력하기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전문 인력과 청년기술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최근 국내건설은 SOC 투자 감소로 인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 신규인력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학교에서는 실무능력이 낮은 이론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소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 반면 해외건설은 호황으로 수주 증가와 함께 해외 건설인력 공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교육과 취업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시장지향형 인재 양성, 양질의 일자리 정보제공과 신규일자리 창출, 청년층 고용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우선,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시장 지향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취업자들의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워킹넷”의 참여업체를 확대하고
  - 해외 일자리 정보망 구축과 해외건설·플랜트 취업설명회 등을 통해, 기술 인력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 더불어, 중·장년 퇴직기술자와 청년 신규 기술자의 일자리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 퇴직기술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지자체 등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청년층 기술자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용역분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을 개정하여 청년 기술자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청년 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기술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을 개정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중년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 단기적으로는 취업정보 제공, 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4

## 공익사업지구 내 주택소유자, 타 주택 살아도 이주대책 적용

### ▶ 이주대책 대상자 확대- 이사비 산정 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주대책대상자 확대

-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
- (개선)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이주대책대상자 포함시에는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이주정착금: 건축물 평가액의 30%  
(상한 1천 2백만원, 하한 6백만원)

#### ※ 현행 공익사업지구 안 거주자 보상

- 소유자 :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 2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세입자 : 4개월 분의 주거이전비 + 이사비

\* 주거이전비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가계지출비

#### ② 이사비 산정시 차량운임 기준 마련

- (현행) 이사비는 세대별 거주면적에 따라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더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통일된 산정기준이 없었음
- (개선) 한국교통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화물자동차 운임을 기준으로 차량운임을 산정하도록 함

#### ③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통지 방법 개선

- (현행) 사업시행자가 보상관련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있음
- (개선) 시·군·구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것 외에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함

#### ④ 보상위탁수수료 요율 조정 기준 개선

- (현행)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게 위탁한 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탁수수료 요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개선) 위탁수수료율의 조정범위를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와 보상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041

##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 상주감리·유지관리 점검 - 6층 이상, 불연 마감재 외벽 의무화

- 앞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천㎡→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5)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정책조정회의('14.12.18)에서 발표한 「건축물 안전강화종합대책」의 세부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2~6월에 걸쳐 입법예고(1차: '15.2.16.~'15.3.30./ 2차: '15.4.22.~'15.6.3.)된 바 있다.
  -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장성요양병원 화재('14.5), 의정부 화재사고('15.1)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화재·구조 안전 관련 기준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 확대

- 현재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천㎡가 넘는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좁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일정 규모 이상(1천㎡)의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하여,

-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감리로 감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 안전 확보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한다.

### ②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 강화

- 건축물의 외벽을 통해 화재가 확산되었던 의정부 화재사고('15.1.10)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하는 대상을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하고,
- 현재,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인접 대지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상업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 앞으로는, 상업지역 내의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건축물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또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해,
  - 층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규모와 관계없이 유독가스 제거를 위한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이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구출과 대피를 용이하게 하였다.

### ③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 확대

- 현재 건축법상 1천㎡이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하여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5백에서 1천㎡ 사이의 건축물의 대상 건수가 6.3%에 이르고(1천 이상 건축물 5.8%) 구조안전문제 발생 시 파급 효과도 커,
  - 건축물 연면적 1천㎡→5백㎡로 확대하여 구조설계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서 제3자의 감독을 받게 하여 구조 설계 시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의 공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향후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감리기준 개정, 불법 건축 관계자 처벌 규정 강화 및 건축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등과 함께 다각화된 정책 추진을 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상주감리는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기간에 따라 2년 혹은 2년 6개월 이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 사용승인일부터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이내  
사용승인일부터 10년~20년 사이의 건축물: 이 영 시행 이후 2년 6개월 이내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42

##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 9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현재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를 확대하여 9.17(목)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 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약 39만 건이다.
  -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 이번 실거래가 공개대상 확대와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는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된다.
- 실거래가 정보는 9월 17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중이며, 하루에 약 4만 건의 접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분양권 및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실거래 가격 정보가 제공되어, 국민들의 매매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 신설 및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도급계약서에 명확화 및 공사의 추가·변경 요구 시 서면으로 하도록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6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건설업자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신규 건설업 교육 의무화(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건설업 교육시간(8시간 이상), 교육내용(건설기업의 윤리경영 및 건설 산업 관련 법규 등), 건설업 교육기관 대상 등 규정

##### 나.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안 제30조제2항)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사유·기간 등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함

##### 다.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안 제34조의8)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요구 방법은 내용증명우편 및 전자문서 등으로 하고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 라. 공제조합 운영위원 수 확대(안 제51조제2항)

공제조합의 조합원 위원(증2) 및 민간 전문가 위원(증3) 수 확대

##### 마. 신규 건설기업의 일시적 자본금 미달 허용(안 제79조의2)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허용(신규 등록 1년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신규 건설업자 등에 대한 교육제도를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3469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신규 건설업 교육 의무화(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건설업 교육기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비 명세 제출 의무, 교육기관 지정서·교육수료증·교육실시결과 서식 등

### 나.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안 별지 제17호, 제17호의2 서식)

### 다.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 개정(안 제38조의2관련 별표1, 2)

국내인력 해외건설현장 고용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산비율 상향 조정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반영하고 법 제82조의2항 부정청탁 관련 재물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시공능력평가 신인도에 감점 항목 추가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의 배상범위가 제 3자의 인적피해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범위를 정함으로써 피해자 보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문 수정(4조, 7조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개정에 따라 동 고시 제4조 및 제7조의 “재산상의 손해”를 “손해”로 수정

### 나. 인적피해 배상범위 마련(6조 관련)

- 현행 용역 배상범위인 순계약금액\*은 인적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어려우므로 별도 보험(공제) 가입금액 기준 마련 필요

\* 설계·건설사업관리 순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가 70~80%('14년 기준)

- 인적피해에 대한 매 사고당 배상한도를 “순계약금액의 100분의1과 5억원 중 많은 금액”으로 설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제3항 준용(건설공사 손해보험가입금액)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토목:일반사항)」 중 일부 개정 공고

### 1. 개정이유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설계도서 작성시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15.1.6)됨에 따라 구조검토 대상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 신설(안 1.5)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만 현장여건 및 자재 등의 변동 가능성이 높은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는 개략 구조검토 시행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공용되는 가설교량 및 노면복공
  -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나.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조항 변경 등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설계자문 → 기술자문, 설계감리 → 건설사업관리 등) 및 인용조항 변경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이공계 출신 대졸자의 취업난 해소와 전문감리원 육성이라는 신규감리원 제도 도입취지와 다르게 경력많은 자가 신규감리원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분야별 감리원 경력인정과 감리원 교체건수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수준이 미흡하고, 비평가대상감리원 등에 대한 비실명제로 감리원의 책임의식 및 소속감 결여로 부실감리 차단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부실감리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하며, 비평가감리원 등도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감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 1) 신규감리원 자격 개선

- 초급·중급건설기술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로 신규감리원 자격요건 변경

#### 2) 감리원 교체건수 제외대상 확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감리원 교체건수에서 제외

#### 3) 신용평가등급발급확인서 인용조문 수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업무 중 신용평가업무 삭제되고, 삭제된 신용평가업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내용 반영

#### 4)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 변경

- 현행 행정제재(부실벌점) 평가기준을 누계평균 부실벌점에서 최근 2년간의 벌점합계로 평가하고, 평가기준도 강화

#### 5) 비평가대상감리원 등 실명 기재

- 등급만 표기하는 비평가대상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도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실명 기입

## 6) 토목감리원 경력인정 내용 조정

-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도로·택지조성공사에 한해 감리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토목감리원에 대해 토목공사 분류에 관계없이 설비감리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

## 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기준

### 1) 유사직종 대체감리원의 범위

- 분야별 감리원이 교육 등으로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동일 직종 감리원 또는 총괄감리원이 대체하도록 하고,
  - 총괄감리원이 교육 등으로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로 대체하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공익사업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공익사업지구에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가. 통지를 갈음하는 공고 방식의 다양화(안 제8조제2항)

- 1)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방법만으로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2) 해당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외에 해당 시(행정시 포함)·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의 홈페이지 및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 나. 이주대책대상자 확대(안 제40조제3항)

-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공익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2)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공익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 다. 보상 위탁수수료 수수료 조정 범위 확대(안 별표1)

- 1)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의 30퍼센트 범위내에 조정할 수 있음
- 2) 위탁 수수료 요율의 조정범위 제한을 폐지하여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가.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 명확화(안 제54조제3항)

- 1)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로서 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서 자기 소유가 아닌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 방지

### 나. 이사비 운임 기준 명확화(안 별표4)

- 1) 공익사업시행지구내 편입되는 건축물의 거주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운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산정방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 운임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최대적재량 5톤인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여 이사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신기술 정보

# 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흥익기술단 외 1인
-------	---------------

### 2.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제 775 호
- 명 칭 : 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
- 기술분야 : 건설>옹벽
- 내용요약

#### (1) 범위

T형 연결판으로 다양한 규격의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전면블록 및 보강재 설치 공정을 중첩시켜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축조 공법

#### (2) 내용

신기술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규격의 전면 블록을 설치하고 전면 블록의 배면 홈에 T형 연결판을 끼우고 여기에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함으로써 전면 블록 설치 공정과 보강재설치 공정을 중첩시켜 연속시공이 가능한 보강토 옹벽 축조 공법이다.

### ○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터파기



2. 블록설치  
(연속시공)



3. 보강재 설치  
(블록에 연결)



4. 속채움 골재 시공



5. 속채움 골재 시공



6. 마감블록 설치

# 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 2개사
-------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 776호
- 명 칭 : 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
- 기술분야 : 토목>교량 교량 상부구조물
- 내용요약

### (1) 범위

BIM을 이용한 설계 및 제작, GFRP 거푸집, 초음파 이용 슬립폼 최적기 상승시스템, 전동스핀들, GPS와 정밀센서를 활용한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시스템 등을 구비한 신형식 슬립폼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을 시공하는 변단면 슬립폼 공법

### (2) 내용

본 기술은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시공시 필요한 신형식 변단면 슬립폼 시스템의 설계, 해석 기술과 BIM기반 디지털 가상 시공 시뮬레이션, 경량 GFRP 모듈형 패널, GPS 및 정밀센서를 이용한 콘크리트 고주탑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 시스템, 표면파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초기 양생 강도 판단 기법, 무선 전동식 스펀들 시스템 등을 포함한 변단면 슬립폼 공법이다

## ○ 신기술의 시공절차 및 방법

	
1. 기초 바닥 설치	2. GFRP 패널, 웨일러, 요크레그 설치
	
3. 래티스 트러스 및 주요계측장비 설치	4. 유압잭 및 펌프 설치
	
5. 철근배치, 콘크리트 타설 및 슬립폼 상승	6. 시공완료 및 슬립폼 해체

## 건설기술심의 현황

### 2015년 제8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심의일자 : 2015. 10. 23.(금)
- 2건(입찰안내서 1건, PQ 1건)
  -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 1건

의안 번호	요청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발주청
2015-08-01	입찰안내서 (적정성)	창원현동 A-3BL 공공분양주택 건립공사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A-3BL · 공사내용 : 434세대(연면적 51,979㎡, 지하 1층/지상 25층) · 공 사 비 : 557억 원 · 공사기간 : 2016 ~ 2018년(3년)	경남 개발공사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심의 1건

의안 번호	용 역 명	발주청
2015-08-02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사천시 (도로과)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6

##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5년 9월	<b>계</b>	<b>56</b>	<b>57,140</b>	<b>55,270</b>	<b>1,870</b>	<b>3.27%</b>	
	공사	토목	27	46,106	44,536	1,570	3.41%
		건축	3	3,691	3,594	97	2.63%
		기타	8	3,407	3,273	134	3.93%
	용역	7	2,782	2,727	55	1.98%	
	물품	11	1,154	1,140	14	1.21%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8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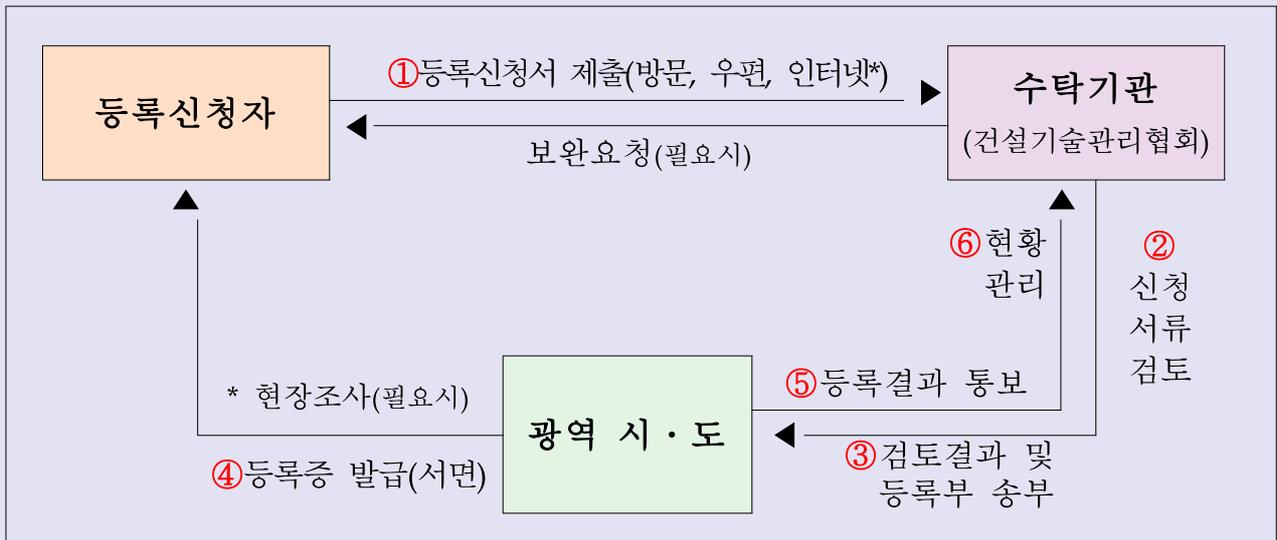
## 2015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문제출)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5회	1.9 ~ 1.16	2.1	3.27	3.30 ~ 4.8	4.25 ~ 5.4	5.22
					3.30 ~ 4.2		
	제106회	4.10 ~ 4.16	5.10	6.19	6.22 ~ 7.1	7.25 ~ 8.3	8.21
					6.22 ~ 6.25		
	제107회	7.3 ~ 7.9	8.1	9.18	9.21 ~ 10.02	10.17 ~ 10.26	11.13
					9.21 ~ 10.26		
기사 (산업기사)	제1회	1.30 ~ 2.5	3.8	3.20	3.23 ~ 4.1	4.18 ~ 5.1	5.8
	제2회	4.24 ~ 4.30	5.31	6.12	6.15 ~ 6.24	7.11 ~ 7.24	7.31
	제3회	7.24 ~ 7.30	8.16	8.28	8.31 ~ 9.9	10.3 ~ 10.16	10.23
	제4회	8.21 ~ 8.27	9.19	10.8	10.12 ~ 10.21	11.7 ~ 11.20	12.18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 <① 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 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 <③ 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 <④ 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 <⑤ 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 <⑥ 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2923~6

FAX : (055)211-2919

e-mail : [kyr4874@korea.kr](mailto:kyr4874@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